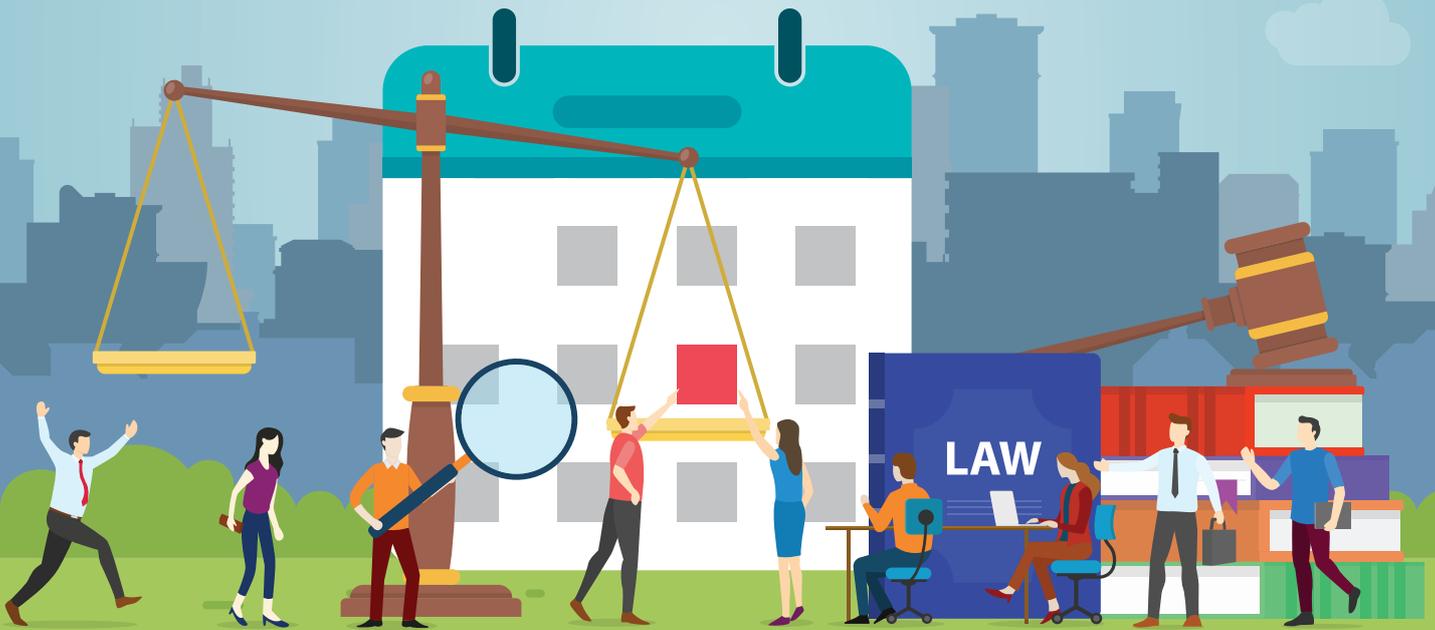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을 위한

입법 방향 토론회



| 주 최 | (가나다순)

강은미 의원, 김주영 의원, 노웅래 의원, 박대수 의원,
안호영 의원, 윤미향 의원, 이수진 의원(비례), 임종성 의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연장과 함께 국민과 함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C/O/N/T/E/N/T/S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을 위한 입법 방향 토론회

인사말

| | |
|-----------------------------|----|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1 |
|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 3 |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5 |
| 박대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 7 |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9 |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11 |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비례) | 13 |
|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15 |
|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 17 |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 19 |

발 제

| | |
|---------------------------------------|----|
| 산재사망 노동자를 기억하기: 인정, 치유, 변화를 위하여 | 21 |
|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 |

토 론

| | |
|------------------------------------|----|
| 토론 1.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 | 33 |
| 토론 2. 임재범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실장) | 37 |
| 토론 3. 이현정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 국장) | 45 |
| 토론 4. 박민호 (전국산재노동자총연맹 위원장) | 67 |
| 토론 5. 이용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장) | 71 |
| 토론 6. 오태웅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장) | 73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국회의원 김주영입니다.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을 위한 입법 방향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토론회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재노동자총연맹 관계자를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로 숨진 노동자만 882명으로, 하루 평균 2.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루에 한 명은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귀한 노동자들의 목숨이 낙엽처럼 떨어지고 있습니다.

2년 전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과 인구 5천만 명을 달성했고, 7번째로 3050클럽에 진입했습니다. 명실공히 경제선진국의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과 기술이 넘쳐나도 앞선 노동자가 떨어져 죽은 자리에 다른 노동자가 또 올라가 떨어지는 이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어느 집안의 가장이, 어느 집안의 희망이었던 청년이 그렇게 어느 봄날 훔날리는 벚꽃처럼 사라지고 있습니다.

매년 4월 28일이면,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 산재희생자 위령탑에서 산재노동자 추모제가 열립니다. 올해도 역시 이 자리에서 추모행사가 이어지겠지만, 여전히 죽지 않고 일할 권리라는 표어는 대답 없는 메아리처럼 구호로 이어진 지는 십수년이 흘렀습니다.

1993년 태국 케이터의 인형 공장에서 일어난 화재사고를 계기로 국제노총과 국제노동기구는 1996년부터 4월 28일을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로 부르기 시작했고, 지금은 100여 개 이상의 나라에서 이날을 기념하는 추모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역사는 기억되지 않고 기억되지 않은 참사는 반복되기 마련입니다. 단순히 추모하는 행사만을 위해서 기념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경제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노동자의 목숨을 제물로 삼지 말라는 외침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더욱 산재노동자의 날의 의미를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산재노동자의 날의 존재가치는 산재 사망 노동자를 추모하는 것은 물론 모두가 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일터에서의 건강과 안전보호가 모든 사람의 권리로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공감대와 연대를 통해 산재노동자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공감대를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함께 의견을 모으고, 나아가 산재노동자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모든 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을 위한 입법 방향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강은미 국회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한 해 평균 10만명이 산업재해로 다치고 2천명이 사망하는 산업재해 공화국입니다. 매일 전국민에게 보고되는 코로나 상황과는 다르게 산재사망은 소리없는 죽음으로 숫자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지난 겨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을 통해 우리사회는 일터의 안전과 참사로부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중대한 사회적 토론을 경험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문제는 노사간의 개별적이고 지역적인 문제로 다뤄지는 것이 예사였고, 심지어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었습니다.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통과된 이 법은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와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등으로 다소 후퇴한 양상입니다. 법 시행까지 1년 남짓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입법취지를 무색케 하는 재계의 압력으로 우려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오는 4월 28일을 전세계가 산재노동자 추모를 위한 날로 정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법정 기념일 제정을 위한 입법을 신속히 논의하여 관련 법, 제도 마련에 힘쓰려고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개최해 주신 김주영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임상혁 녹색병원
원장님과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님 고맙습니다. 토론으로 함께 해주시는 현장 활동가와
전문가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정의당은 노동이 당당한 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응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 국회의원 노응래입니다.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을 위한 입법 방향〉 토론회 개최를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런 뜻깊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강은미, 김주영, 박대수, 안호영, 윤미향, 이수진(비례), 임종성 의원님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주신 전문가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고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 1위입니다. 연간 2,400여명, 하루 6명 이상이 출근을 했다가 집에 영영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높은 산재사고 비율의 가장 큰 이유는 일부 기업들이 여전히 노동자들의 안전보다는 이윤추구와 책임회피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회 환노위에서는 지난 2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초로 산재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관리 부실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음에도 포스코에서는 또다시 안전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가 안타깝게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산재노동자의 날이 법정으로 기념일이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열리는 토론회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되길 바라며 참석하신 전문가들께서 좋은 고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시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4. 22.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 국회의원 노웅래



박대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대수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을 위한 입법 방향 토론회」에 귀한 발걸음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히 오늘 토론회 개최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신 김주영 의원님과 토론을 준비해주신 전문가 패널, 여러 관계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보릿고개 언덕을 넘던 대한민국이 반세기만에 국민소득 3만불, 세계경제 10위의 경제 대국으로 거듭났습니다. 세계경제사를 통틀어도 전례를 찾기 힘든 최고의 성과입니다.

하지만 이 빛나는 영예의 이면에는 각종 현장에서 유명을 달리한 수만 명의 산재 노동자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처럼 노동자의 고통을 등한시한 과거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무려 반세기가 흘렀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에는 하루 세 명의 노동자가 산업 현장에서 세상을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회가 노동자보단 생산성을, 작업환경보단 효율성을 중시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이에 4월 28일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여 국가 경제 성장의 과실 이면에서 유명을 달리한 모든 노동자를 추모하고, 산재노동자의 권익향상과 예방에 적극적으로 힘을 쏟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산업재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어내야 합니다. 기업은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투자를 확대해야 하며, 노동자는 더욱 더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국회에서도 산재 다발 기업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개최할 정도로 산업재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다양한 산업재해 예방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고 취합될 오늘 토론회가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의 마중물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국회의원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위원 안호영입니다.

먼저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재정’이라는 중요한 의제를 토론의 장으로 이끌고 와주신 김주영의원님,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고견을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4월 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입니다. 1993년 태국의 한 장난감 공장에서 화재로 사망한 188명의 노동자를 기리기 위해 1996년 4월 28일 ICFTU(국제자유노련)가 전 세계 노동조합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태국 화재사고 사망노동자 등에 대한 촛불의식을 거행하였고, 그 후 매년 4월 28일을 추모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현재 캐나다, 스페인 등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도 매년 4월 28일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공감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다행인 것은 요즘 ‘산업재해’와 ‘산재노동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입법적 해결책들이 꾸준히 제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속도감 있게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재정을 위한 새 판로를 열어야 할 때입니다.

노동은 돈벌이 수단만이 아닌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존엄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어야 합니다.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을 통해 정부의 역할을 강화시켜 산재 희생자와 산재 노동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공로를 인정하고, 그 가족들에 대한 책임 있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산재 노동자의 날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을 두루 짚어, 산재 노동자의 날이 우리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길 바랍니다.

저도 발제자 및 토론자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공부하여, 입법과 제정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미향입니다.

오늘 김주영 의원님을 비롯해 여야 의원님들과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을 위한 입법 방향 토론회’를 함께 주최하게 되어 의미가 깊습니다.

얼마 전 마석 민족민주열사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앓던 얼굴로 사진으로 남은 고 문송면 열사를 마주했습니다. 문송면 열사는 온도계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다 수은 중독과 유기용제 중독으로 1988년 사망했습니다. 17세 소년 노동자가 쓰러졌던 그때를 떠올리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산재 노동자를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산재문제는 문송면 열사에 그치지 않았습니니다. 다양한 사업장에서 다양한 죽음이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최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2천 62명입니다. 정부가 산재 사망 감축을 위해 노력한다고 했지만,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산재노동자의 날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단순히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노동자 당신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지 못한 나 자신을 반성합니다”, “산업재해가 없는 사회를 위해 실천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을 한 번 더 가다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ILO와 국제노총은 1996년부터 매년 4월 28일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로 지정하고 산재를 없애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산재사망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가 당연히 기억해야 할 날을 지나쳐온 것은 아쉽습니다.

정부는 2023년 산업안전보건청 출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재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입니다. 이와 함께 ‘산재노동자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해 산업안전을 정착시키는 마음 가짐도 가져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말씀을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국회 환경노동위원으로 안전한 일터, “잘 다녀올게”라는 출근인사가 가족에게 안심이 되는 사회가 되도록 뚜벅뚜벅 실천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다시 한번 산재노동자를 기억하며, 돌아가신 노동자들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비례)

안녕하십니까. 노동존중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을 위한 입법 방향 토론회」를 존경하는 여야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그리고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함께 주최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4월 28일은 1993년 태국의 한 장난감 업체에서 화재로 사망한 188명 노동자의 넋을 기리고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연합(UN)이 지정한 ‘세계 산재노동자의 날’입니다. 이미 캐나다, 스페인, 대만 등 19개 국가에서는 이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있고 그 외 수많은 나라에서 이날에 산재노동자를 추모하는 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조합과 유관단체를 중심으로 산재희생자 위령탑에서 추모제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국가차원에서 산재노동자의 희생을 추모하는 것에는 크게 못 미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산재사망자 수가 2,000명을 오르내리고 있듯 수많은 노동자가 현장에서 귀중한 목숨을 잃거나 장애인이 되었음에도, 이들의 국가적 공로에 대한 명예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산업역군이라는 미명 하에 노동자들의 헌신을 당연시하였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낡은 개발이념입니다. 민주화된 우리사회에서는 더 이상 통용될 수 없습니다.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기점으로 산업안전에 대한 기업의 경각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여기에 머물지 않고 사회 전반에 걸쳐서 산업안전에 대한 의식 제고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산재노동자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는 제도개선’은 산재노동자의 희생을 사회 구성원 전체가 기억하고 추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이를 통해 산재예방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저 역시도 입법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의 사회를 맡아주신 임상혁 녹색병원장님과 발제를 해주시는 이상운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토론자로 참여해 주시는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님, 임재범 한국노총 산업안전 보건본부 실장님, 이현정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 국장님, 박민호 산재노동자총연맹 위원장님, 이용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장님, 오태웅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장님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토론회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임종성입니다.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김주영 의원님과 오늘 토론회에 함께 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월 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입니다.

1993년 4월 28일, 태국의 한 장난감 업체에서 188명의 노동자가 화재로 사망했고 이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각국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촛불을 밝혔습니다. 유엔에서 추모의 날을 지정한 배경입니다.

이미 110개 이상의 국가에서는 매년 이날을 추모하는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브라질, 스페인 등 13개 국가는 ‘산재노동자의 날’을 국가 공식기념일로도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는 매년 평균 9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지만, 이들을 추모하는 국가 차원의 법정기념일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산재사망 노동자에 대한 추모와 노동자의 권리 증진, 산재사고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산재노동자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하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어갈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현장에서 희생된 산재노동자들에 대한 추모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산재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산재노동자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되고, 국가경제발전을 위해 희생하신 노동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노동자와 가족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나가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뜻깊은 토론회 개최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산업재해 없는 노동 현장과 산업재해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입법 활동을 함께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 위원장 김동명입니다. 우선 이렇게 뜻깊은 토론회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강은미 의원님, 김주영 의원님, 노웅래 의원님, 박대수 의원님, 안호영 의원님, 윤미향 의원님, 이수진 의원님, 임종성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토론회가 개최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부가 산재통계를 공식 집계하기 시작한 1964년부터 2020년까지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수는 무려 9만6천여 명에 달하고, 재해자 수는 500만 명에 달합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에 속하며 여전히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1996년 국제자유노련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노동자를 죽이고 몸을 망가지게 하는 발전은 지속가능한 발전이 아니다.”라고 외치며 처음으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들을 위해 촛불을 든 날, 산재노동자를 위한 추모는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영국 등 총 19개 국가에서는 법정기념일로 매년 4월 28일을 ‘산재 노동자 추모의 날’로 지정하여 추모와 기념행사를 하고 있으며, 총 120개국에서 산재 희생자 및 노동자를 추모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53개의 국가기념일과 기타법령에 따른 67개의 기념일이 존재하지만, 이중 산업재해로 다치거나 사망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추모와 관련된 기념일은 전무한 실정으로 국민에게 산업재해라는 사회적 재난에 대한 위험성과 산재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한국노총은 국내의 심각한 산재 발생 수준을 개선하고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리고자 99년 4월 ‘산재희생자 위령탑’ 건립을 정부에 촉구하였고, 2000년 12월 보라매공원에 ‘산재희생자 위령탑’을 건립한 이후 산재 사망노동자의 넋을 기리고 위로하는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 행사를 매년 4월 28일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21회로 4월 28일 산재희생자 위령탑에서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제발전이라는 미명아래 노동자의 목숨을 제물로 삼지 말라는 외침은 여전히 이 땅에도 유효합니다. 국가경제발전을 위해 노동현장에서 산업재해로 희생된 노동자를 추모함과 동시에 산재노동자의 권익향상을 도모하고 산재 희생자의 명예 보상과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함으로써 산재 희생자 및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4월 28일 ‘산재노동자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오늘 토론회에서 함께 논의하고 현실화하였으면 합니다.

한국노총은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언제나 앞장설 것입니다. 연대의 정신으로, 단결의 힘으로 산업재해가 없는 노동현장을 위해, 산업재해로 희생된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토론회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4월 2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 동 명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죽은 자를 추모하고 산자를 조직하라!

민주노총은 해마다 7월에 산재추방운동을 실천해오다 2002년부터 매년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정하고 산재사망으로 죽은 노동자를 추모하고 산자를 조직하는 투쟁을 전개해왔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은 한 해 2400명이 산재사망하는 나라입니다. 하루에 7명의 노동자가 집으로 퇴근하지 못합니다. 한국경제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OECD 기준 세계 10위 내외의 경제규모가 되었지만 산재사망에서는 여전히 개발도상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목숨보다 기업을 우선하는 문화로, 노동자는 일할 때는 산업역군으로 포장되었지만 다치고 병들거나 사망하면 유족과 동료만이 그 죽음을 기억할 뿐이었습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거치며 노동조합은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는 조직이 되었고, 그 속에서 산재추방, 노동안전 활동도 자라났습니다. 일하다 죽을 수도 있다는 인식은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쟁취하자는 실천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산재사망은 노동자의 실수나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문제임을 사회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8일, 산재사망은 기업의 조직적·구조적 범죄라는 시대적 인식을 담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법률명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까지 이릅니다.

1988년 7월 2일 수은중독으로 사망한 소년 문송면, 그 죽음을 계기로 사회에 알려진 원진레이온 노동자 집단 이황화탄소 중독과 사망은 직업병 인정 투쟁 과정에서 많은 성과를 남겼습니다. 그 중 하나가 잊지 않고 기억하기, 추모에 머무르지 않고 산자를 조직해 더욱

안전한 현장을 남기자는 지속된 투쟁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산재노동자의 날이 제정된다면 기억하기를 넘어 더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한국사회를 추동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4월 28일은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들을 기리는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Workers’ Memorial Day)’입니다. 미국의 유명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 인형을 생산하는 태국 공장에서 일어난 화재로 사망한 188명(174명이 여성노동자)의 노동자를 추모하는 촛불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도 이와 유사한 사고가 있습니다. 바로 1960년 3월 2일 부산 범일동 국제고무공업주식회사에서 발생한 화재로 노동자 62명이 사망한 산재참사입니다. 이 참사 역시 태국의 심슨인형 제조 공장 노동자들처럼 화재가 발생했지만 도망갈 수 없는 구조가 있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역사가 미처 기록하지 못한 산재사망 노동자를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개최를 제안해주신 김주영 의원님, 공동주최로 나서주신 강은미, 노웅래, 박대수, 안호영, 윤미향, 이수진, 임종성 의원님에게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미있는 자리에 함께 해주신 한국노총과 발제, 토론을 맡아주신 노동건강연대, 산재노동자총연맹, 일과건강에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산재사망 피해 유가족으로서 늘 큰 울림을 주시는故이한빛 피디의 아버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용관 이사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7명의 명복을 빌어야 하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는 사회로 한 발 나갈 수 있도록 늘 노동자 곁에 민주노총이 함께 서있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뒤 처음 맞는 4월 28일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죽지 않고 일할 권리가 모든 노동자의 권리가 되도록 더욱 단단한 결의를 다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4월 22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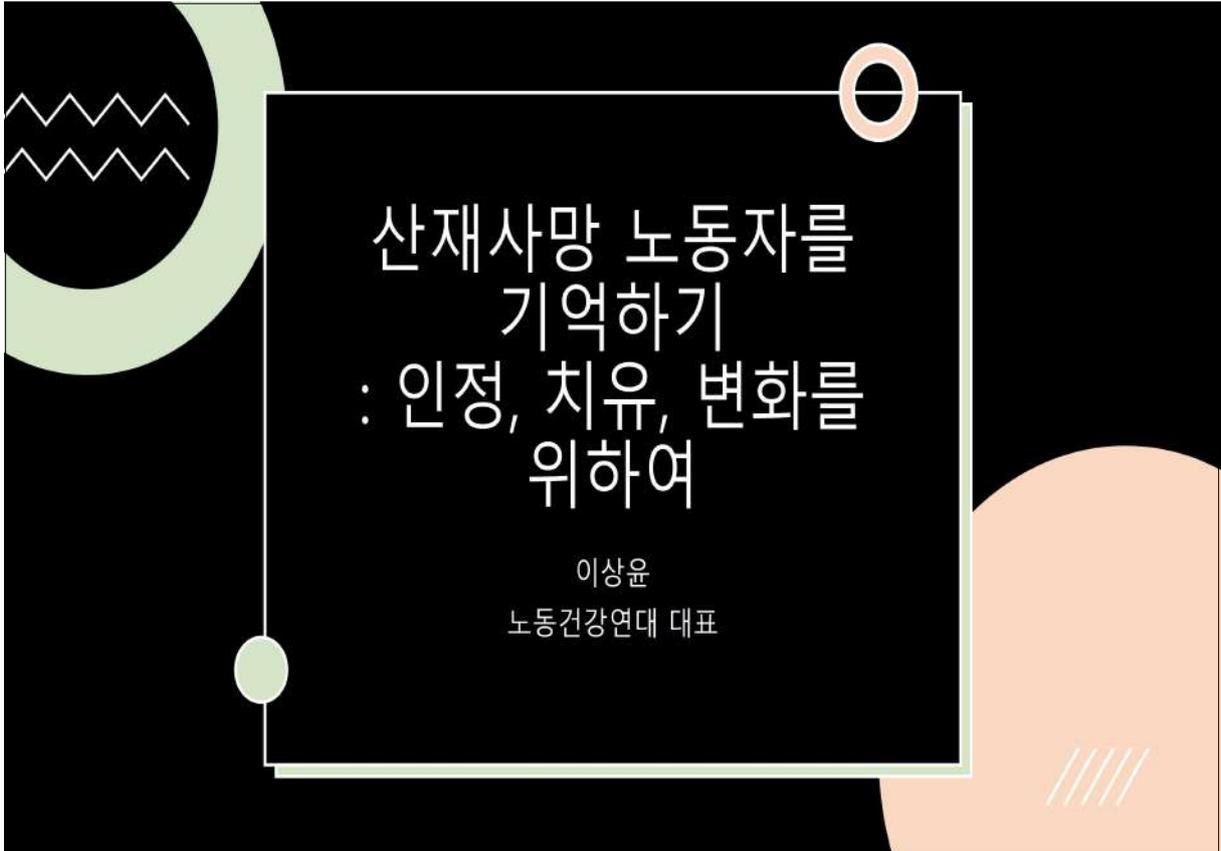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을 위한 입법 방향 토론회

발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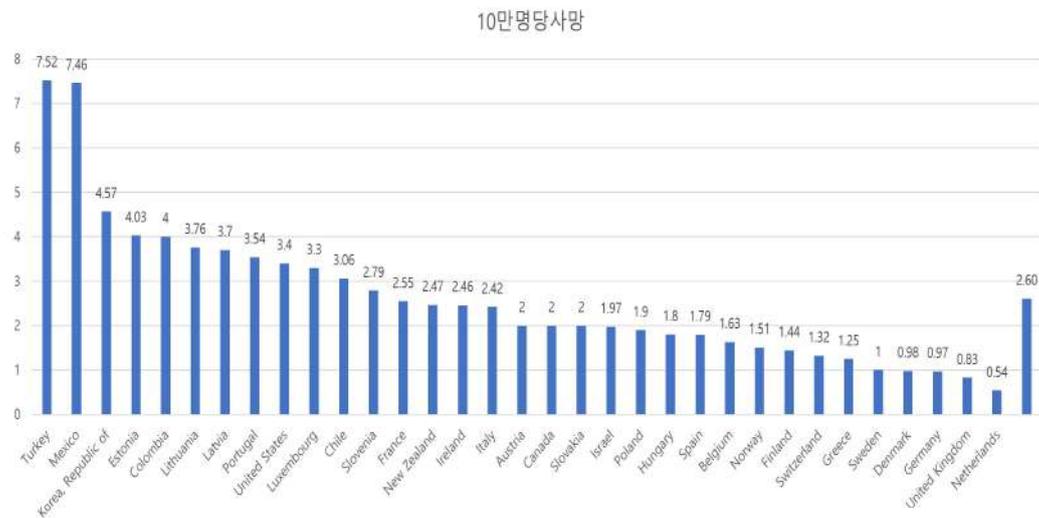
산재사망 노동자를 기억하기: 인정, 치유, 변화를 위하여

이상윤 |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한국의 노동자 산재 사망



문제 해결 이 어려운 이유

산재 사망에 대한 견고한 프레임

- 노동자 책임, 부수적 피해, 운명

당사자들이 문제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

- 유족,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의 한정적 역할

한국에서 "노동자" 위상

- "코로나19에 견뎌 왜?"

문제의 규모, 심각성 축소, 해결가능성에 대한 회의

- 산재 통계의 문제

사회적 관심 및 자원 할당의 우선순위에서 밀림

- "노사가 알아서 좀 합시다"

산재 사망 노동자를 기억하기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이자 치유, 변화의 과정

노동자에 대한 인정(Recognition)

- "너의 잘못이 아니야"
- "노동자는 사회의 주역"

치유(healing)

- "당신은 늘 우리와 함께 있다"

변화(change)

- 살아 있는 이들을 위한 결의

기억의 다양한 형태(1)



기억의 다양한 형태(2)



“아래로부터 의” 기억과 추모

- 비탄과 추모의 감정 표현 뿐 아니라 일종의 항의와 저항을 담은 기억
- 특정한 상황에 대한 분노와 변화의 염원을 담은 기억
- 공중 공간에서의 자발적이고 비정형적인 기억과 추모 행위
 -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운 임시 사원(shrine) 만들기
 - 임시변통의 추모 공간과 추모 조형물 만들기
- 비탄과 추모에 그치지 않는 의문과 행동을 유발
 - “이 사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해”
 - “바뀌야 해, 정의를 위해!”
- 특정한 조직이 없더라도 참여자는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고 행동에 참여하게 됨

외국의 사례(1)



외국의 사례(2)



특징 1 – 비정형성, 자발성

특정 형식과 관습에 얽매이지 않음

모든 참여자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기억하고 추모함

특정한 물체 혹은 물건을 활용한 기억과 추모

강제하지 않으나 특정한 형태와 리듬을 가지게 됨

자발성, 신뢰성, 진실성, 참신함, 독창성

특징 2 – 순간성, 비지속성

즉각적인 행동과 즉각적인 효과를 지향하는 행위

시간이 지난 후 정형화되고 지속화될 수는 있음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오래 지속되지 않고 사라지는 것

“잊지 않을까” 보다는 “행동하고 실천할까”에 대한 다짐

쉽게 사라지고 잊혀질 수 있으나, 일정한 모멘텀을 가지게 될 경우 자기 복제하며 지속적인 기억과 행동을 유발함

특징 3 – 특정 공간과 구조물에 얽매이지 않음

광장 혹은 무대에서 펼쳐지는 단막극 같은 형식

비극적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장소에서 시작하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공간적 범위를 넘어섬

보다 많은 사람이 보고 참여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사건

순간적인 기억과 추모가 지나간 후 해당 공간은 “빈 자리”가 되지만, 빈 자리가 주는 감정적 고양 존재

특징 4 – 감정의 물질화

기억과 추모의 감정을
담은 특정 물건 혹은 상징

- 수첩, 사발면, 꽃, 촛불, 카드,
편지, 신발 등

죽은 자를 상징할 뿐
아니라 산 자들의 저항과
행동을 담은 상징

아래로부터의 기억과 추모 행위의 의의

깨어 있는 시민의 자발적, 정치적, 사회적 행동을 매개

기억과 추모를 매개로 광범위한 연결과 연대를 형성

참여를 통한 공통 감각, 공통 인식의 발생

다양한 의미화와 상징화 작용 동반

가족과 동료에게는 치유의 과정

아래로부터의 기억, 추모와 치유

기억과 추모 행위는 유족과 동료들에게 물리적 연결감을 제공

산재사망 노동자가 잊혀지지 않았고 그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인식을 제공

노동자 책임으로 전가되는 경우가 많은 현실 속에서 산재사망 노동자의 죽음을 떳떳이 말할 수 있는 계기가 제공

유족과 동료 입장에서는 죽음으로 단절된 관계의 지속 혹은 복원의 계기 제공 : 개별적이고 특개성을 가진 내러티브의 생성

유족과 동료에게 산재사망 노동자의 죽음은 잊어야 할 그 무엇이 아니라 현재화된 의미로 존재하게 됨

마치며 : 산재노동자의 날을 법정기념일화 하는 것에 대해

모든 기억은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인 것

모든 기억은 사후에 발생하는 상징, 행사, 행동 등에 의해 재구성됨

어떤 것을 기념하고 반추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기억하고 추모할 것인가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

산재노동자의 날을 국가가 지정하는 기념일로 한다는 것 : 국가 내에서 '노동자' 의 위상과 관련된 것

하지만 법정기념일화 됨으로써 국가화, 관료화, 정형화되어, 의미 없는 기억과 추모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을 위한 입법 방향 토론회

토론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
임재범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실장)
이현정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 국장)
박민호 (산재노동자총연맹 위원장)
이용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장)
오탈웅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장)



토론 1. ‘산재노동자의 날’ 제정에서 담아야 할 내용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

1. 4월 28일 vs 7월 2일

4월 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이날은 1993년 4월 10일 태국 케이더(Kader)의 한 공장에서 일어난 화재사건이 계기가 됐다. 이 공장은 당시 한창 인기 있던 심슨(Simpson) 인형을 만드는 공장이었다. 이 공장 안에서 일어난 불은 188명의 노동자를 재로 만들었다. 188명이나 되는 노동자들이 불을 피해 도망가지 못했다는 것이 언뜻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이유는 간단했다. 일당보다 비싼 심슨 인형을 노동자들이 훔쳐갈까 봐 사측이 공장 문을 밖에서 걸어 잠근 것이다. 188명의 노동자는 그렇게 굳게 닫힌 문 앞에서 쯤더미가 됐다. 자본가의 탐욕이 낳은 이 끔찍한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1996년 4월 28일 미국에서 열린 유엔 '지속가능한 발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던 각국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촛불을 밝혔다. 전 세계 110개국 노동자들이 추모하는 '4·28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은 이렇게 시작됐다.¹⁾

한편 이보다 먼저인 1988년 7월 2일 우리나라에서는 갓 15세밖에 되지 않은 소년 문송면의 죽음이 있었다. 가난 때문에 고등학교를 진학할 수 없었던 소년은 서울에 와 기숙형 공장에서 일을 하면 야간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상경한다. 그러나 그 공장은 온도계를 만드는 곳이었고 입사 후 2달을 겨우 참고 퇴사를 결정하게 된다. 그 이유는 몸이 너무 아팠기 때문이다. 원인을 모르고 한 달 이상 병원을 전전하다가 결국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수은중독'을 진단받는다. 노동부는 회사의 주장에 따라 산재신청을 반려했고 지지부진하게 시간만 끌어 소년의 치료를 늦추었고 결국 소년은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고 사망했다. 이 소식은 보건의료인은 물론이려니와 노동자, 지식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게 되었고 비로소 산재추방운동의 출발점이 되었다.

1) 최규진,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노동자연대 173호, 2016년 4월 28일자.

당시 노동운동단체, 보건의료단체, 재야사회단체, 종교단체 등 37개 단체들로 조직되었던 '고 문송면 산업재해 노동자장 장례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이후 원진레이온 직업병 대투쟁이 물고를 트면서 대한민국에는 큰 변화가 찾아왔다. 노동부에는 산업보건을 담당하는 부서가 신설되었고 정부기관으로 직업병연구소가 문을 열었다. 또한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제도도 도입되었다. 다음해인 1989년 12월 '정부의 산재예방 책무 신설', '산업재해 예방기금 설치', '노사 동수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산재예방교육 의무화 등'이 도입되었다. 원진레이온 직업병 투쟁 이후 산재추방운동단체들은 노동조합과 함께 다양한 공동사업을 진행했는데 바로 7월 공동사업이었다. 7월은 무재해 운동을 벌이는 정부가 지정한 '산업안전보건의 달'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산재추방운동의 효시가 된 날을 산재노동자의 날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국제적인 날을 산재노동자의 날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2. '산재노동자의 날'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2023년 '산업안전보건청' 출범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탈피하여 노동자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산재노동자의 날이 제정된다면 산업안전보건청에서 이 업무를 향후 꾸준히 진행해 가야 할 것이다.

산재를 당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산재노동자의 날에는 예방과 관련한 전국적 수준의 캠페인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7월 행사는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다 대상도 매우 협소한 수준이어서 모든 '일하는 사람'을 망라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산재를 당하고 사망한 노동자의 경우 유족이 발생한다. 유족은 큰 슬픔 속에 있지만 사후 관리는 전혀 안 되고 있으며 오히려 드러나기를 꺼리기도 한다. 오래된 '원진산재피해자협회'나 최근의 '이한빛 재단'이나 '김용균 재단'과 같이 산재 피해자 또는 유가족이 재단을 만들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른 유족지원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산재를 당하고 후유증(장애 등)을 가진 노동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재 후 재활(사회적, 직업적)의 수준을 매년 파악하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결과는 산재노동자의 날에 공포하도록 한다. 그래야 산재 경험자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 입안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를 일으켜 처벌을 받은 기업에 대한 정보도 이 시기에 공포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하게는 산재 예방을 위한 장기(5년 단위 계획), 단기 계획(1년 계획)에 대한 비전 제시와 토론도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3. ‘산재노동자의 날’ 제정의 확장성을 위해

우리사회는 안전과 생명에 대한 감수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노동자 사망과 시민 안녕에 대해서는 접근하는 관점이 다르다. ‘인부 A씨 사망’에는 분노하지 않는 언론이나 시민은 ‘아이가 쓰는 엉덩이 분에 들어간 탈크’ 문제에서는 난리가 난다. ‘환경호르몬이 들어간 학습교구’에 대해서는 아우성을 치지만 ‘그 학습교구를 하루 8시간 이상 계속 만드는 노동자’의 건강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다. 이러한 문제는 아직도 노동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강하다는 것이고 노동(고급 일자리가 아닌 나머지 영역의 노동)을 비하하는 인식체계 하에 갇혀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에서도 주로 ‘사망’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뚜렷이 보이는데 사실상 하인리히법칙에서도 1:29:300이라는 수치를 제공하고 있고 우리나라 산업재해에서도 사고재해의 경우 1%가 사망하고 질병재해의 10%가 사망하고 있는데 나머지 99%, 90%는 지속되는 후유증과 고통 속에서 재발의 경험을 겪으며 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사회복지율은 40%수준에 머물러 있다. 산재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무직과 빈곤상태를 겪어야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고용에 있어 서비스산업에서 일하는 취업자의 비율이 80%에 육박해 있다. 대부분의 중대재해는 1차 산업과 제조업, 그리고 건설업에서 발생하지만 중대재해가 아닌 경우는 주로 서비스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고객, 민원인 등)와의 갈등을 겪는 집단의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돌봄노동을 하는 집단, 배달노동을 하는 집단, 가정방문 노동집단, 콜센터 노동집단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그런데 이들 노동자에게 가해

를 하는 자는 모두 소비자이다. 물론 사업주도 한 몫을 한다. 그러나 사업주 책임으로, 법·제도만으로 이들의 업무상 고통을 제어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많다. 소비자의 인식개선도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산재노동자의 날에는 이런 문제인식이 모두 반영되어 노동안전에 대한 국민적 감수성을 높이고 국가가 제대로 노동자 안전을 위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내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토론 2. 4.28 산재노동자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필요성 및 방안

임재범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실장)

1. 산재노동자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목적 및 필요성

○ 목적 및 필요성

- 정부가 산재통계를 공식 집계하기 시작한 1964년부터 2019년까지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수는 무려 94,511명이며, 재해자는 4,996,891명에 달함

〈표 1〉 최근 5년간 산업재해분석

| 구분 \ 연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노동자(명) | 17,968,931 | 18,431,716 | 18,560,142 | 19,073,438 | 18,725,160 |
| 재해자(명) | 90,129 | 90,656 | 89,848 | 102,305 | 109,242 |
| 재해율(%) | 0.50 | 0.49 | 0.48 | 0.54 | 0.58 |
| 사망자(명) | 1,810 | 1,777 | 1,957 | 2,142 | 2,020 |
| 사망만인율(‰) | 1.01 | 0.96 | 1.05 | 1.12 | 1.08 |
| 근로손실일수(일) | 47,538,877 | 47,035,222 | 47,355,044 | 52,757,858 | 54,544,623 |
| 경제적손실(백만원) | 20,395,540 | 21,400,275 | 22,180,190 | 25,169,507 | 27,646,799 |

자료 : 고용노동부

- 2019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로 인해 109,242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였으며, 그중 2,020명이 사망하고 92,932명이 부상, 14,030명이 업무상 질병에 걸림. 이는 하루에 약 300명이 재해를 당하고, 그중 약 6명이 산재로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산업재해로 인한 직·간접 손실을 포함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약 27조6억원으로 국가 한 해 예산의 약 5~6%에 달함. 또한, 근로손실일수는 54,544,623일로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402,000일의 135.7배에 다다름
- 한국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에 속하며 여전히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에는 부족함

- 2017년 대통령은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담화문을 통해 ‘정부의 최우선 가치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며,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 될 수 없다’라고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는 한 사람의 노동자만이 아니라 가족과 동료 지역공동체의 삶까지 파괴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였지만, 국가경제발전을 위해 무수히 많은 노동자가 노동현장에서 산업재해로 귀중한 목숨을 잃거나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이들의 공로에 대한 추모나 명예 보상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임
- 미국, 영국 등 총 19개 국가에서는 법정기념일로 매년 4월 28일을 ‘산재 사망노동자 추모의 날’로 지정하여 추모와 기념행사를 하고 있으며, 또한 총 120개국에서 산재 희생자 및 노동자를 추모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53개의 국가기념일과 기타법령에 따른 67개의 기념일이 존재하지만, 이중 산업재해로 다치거나 사망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추모와 관련된 기념일은 전무한 실정으로 국민에게 산업재해라는 사회적 재난에 대한 위험성과 산재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필요함
- 따라서, 국가경제발전을 위해 노동현장에서 산업재해로 희생된 노동자를 추모함과 동시에 산재노동자의 권익향상을 도모하고 산재 희생자의 명예 보상과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함으로써 산재 희생자 및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4월 28일 ‘산재노동자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할 필요가 있음

2.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 유래 및 현황

○ 유래 및 동향

- 1984년 캐나다 노총(CLC) 집행위원회는 매년 4월 28일을 노동현장에서 순직하거나 다친 노동자들을 추모하기로 선언함
- 1987년 미국노총(AFL-CIO)에서도 4월 28일을 ‘노동자기념일(Workers’ Memorial Day)’로 채택함
- 1993년 태국 장난감 회사에서 화재로 188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 1996년 4월 28일 ICFTU(국제자유노련)가 처음 UN-CSD(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기 중 전 세계 노동조합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태국 화재사고 사망노동자 등에 대한 추모의 촛불의식을 거행한 이후 매년 4월 28일에 기념일을 실시함
- 미국, 영국 등 총 19개 국가에서는 매년 4월 28일을 ‘산재 사망노동자 추모의 날’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는 등 총 120개국에서 산재노동자를 추모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고 있음

○ 국가별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 현황

- 국가별 제정 현황

- 1) 캐나다 : 1991년 '노동자 애도의 날에 관한 법(Workers' Mourning Day Act)'이 입법 통과되면서 최초로 국가 차원의 추모의 날로 지정함
- 2) 태국 : 공장화재로 188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1993년 5월 10일을 법정 '산재 사망노동자 추모의 날'로 기념
- 3) 스페인 : 1998년 6월 매년 4월 28일을 '작업장 보건안전의 날(National Day of Workplace Health and Safety)'로 채택하는 법령이 통과되면서 1999년부터 매년 4월 28일을 국가 차원의 추모의 날로 정하고 공식 행사를 진행함
- 4) 대만 : 2001년 '산업재해 및 질병보호법'의 조항에 4월 28일을 '산재 사망노동자 추모의 날'로 지정
- 5) 포르투갈 : 2002년 처음으로 정부가 추모 행사를 치렀으며, 특별 우표를 발행하고 모든 공공건물에서 국기를 조기 게양
- 6) 브라질 : 2003년 노사정 차원에서 4월 28일을 법정 추모의 날로 정할 것을 건의하여 확정함
- 7) 그 외 미국, 영국 등 총 19개 국가에서는 매년 4월 28일을 '산재 사망노동자 추모의 날' 법정기념일로 정하고 있음

※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나라(총 19개국)

캐나다, 태국, 스페인, 대만, 포르투갈, 브라질, 도미니카공화국, 아르헨티나, 버뮤다, 페루, 파나마, 벨기에, 룩셈부르크, 호주, 영국, 아일랜드, 지브롤터, 방글라데시, 미국

○ 국제적인 흐름

- 국제적으로도 산업재해는 큰 문제가 되고 있음
- 국제자유노련(ICFTU)은 불안정한 작업장 때문에, 전 세계에서 매년 110만여 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며, 이는 전쟁 사망자의 2배, HIV/AIDS 사망자의 3배에 이른다고 밝힘
- 또한, 각 국가에서 공식 발표된 것에 의해 집계된 이 수치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사실에 우려를 금치 못하고, 전 세계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지난 96년부터 매년 4월 28일을 '산재노동자 애도의 날'로 지정하고 국제 행사를 개최하고 있음
- 캐나다, 스페인, 태국 등은 '산재노동자의 날'을 이미 법제화하였고 영국, 일본, 미국 등 대부분의 OECD 가맹국에서는 이날을 맞아 노사정이 함께 산재예방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국가적 행사를 갖고 있음

3. 산재노동자의 날 유사 국가기념일과의 구분

○ 장애인의 날(4. 20)

-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81년도에 제정
-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이고, 각 장애인 단체들이 행사를 주관
- 97년도부터는 4월 20일부터 1주간 장애인 주간으로 지정하여 체육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2000년도에는 학술세미나, 장애인고용촉진캠페인, 뇌성마비인 축구대회, 휠체어 농구대회 등이 개최되었음
- 장애인에는 산재장애인이 일부 포함되므로 장애인의 날과 산재노동자의 날이 중복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으나, 산재장애인은 전체 산재 희생자 중 일부에 불과함. 특히,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의 재활 의욕 고취 등에 한정되어 있지만, '산재노동자의 날'은 산재 희생자에 대한 추모, 직업재활뿐만 아니라 범국가·사회적 산재예방 의식을 함양함으로써 산재를 근절하고자 함이 목적임

○ 노동절(근로자의 날 5. 1)

- 노동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매년 5월 1일 노동부가 주관하고 노동계는 별도로 기념행사와 집회를 실시함
- 노동절과 산재노동자의 날이 모두 노동자를 위한 날이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으나, 국군의 날과 현충일이 다른 것처럼 노동절과 산재노동자의 날은 기본적으로 제정 취지가 다름. 즉, 앞서 본대로 노동절은 노동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노동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이 목적이지만, 산재노동자의 날은 산업현장의 역군으로 희생당한 노동자들을 기리고 이를 통해 범국가·사회적 산재예방 의식을 함양함으로써 산재를 근절하고자 함이 목적임

4. 한국노총의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 활동 경과

○ 활동 경과

- 한국노총은 국내의 심각한 산재 발생 수준을 개선하고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리고자 99년 4월 "산재희생자 위령탑" 건립을 정부에 촉구하였고, 99년 8월 노사정 공동참여로 위령

탑을 건립하기로 결정됨

- 한국노총은 2000년 12월 보라매공원에 ‘산재희생자 위령탑’을 건립한 이후 매년 4월 28일을 산재 사망노동자의 넋을 기리고 산재노동자를 위로하는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 행사를 진행하고 있음. 올해는 제21회로 4월 28일에 산재희생자 위령탑에서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제를 진행할 예정임. 단,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한국노총 내부 행사로 간소화하여 진행 예정임. 한국노총의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 활동 경과는 다음과 같음
 - 1) 산재사망자의 넋을 기리기 위하여 1999년 4월 한국노총이 건의하여 2000년 12월 ‘산재희생자 위령탑’을 보라매공원에 건립함
 - 2) 한국노총은 2000년 8월, 매년 4월 28일을 산재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산재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산재노동자의 날’로 지정하고 매년 행사 개최를 공포함(국제자유노련과 연대하여 4월 28일을 ‘산재노동자의 날’로 제정해 각종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산재예방 활동의 활성화를 유도)
 - 3) 2001년 4월 28일 ‘제1회 산재노동자의 날’ 행사를 노사정 및 산재노동자 등 7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희생자 위령탑 앞에서 대대적으로 개최함. 이후 매년 4월 28일에 ‘산재노동자의 날’ 행사를 개최
 - 4) 2001년 산재노동자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해 ‘산재노동자의 날 제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입법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함
 - 5) 2002년 2월 김락기의원 청원소개로 ‘산재노동자의 날 제정에 관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
 - 6) 2006년 4월 28일 ‘제6회 산재노동자의 날’ 행사 및 추모 전야제 개최
 - 4월 27일 산재노동자의 날 전야제로서 산재 희생자 추모 촛불의 밤 및 산재보험의 개악저지를 위한 노동자 결의대회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최
 - 7) 2007년 4월 28일 ‘제7회 산재노동자의 날’ 행사 및 문화행사 개최
 - 4월 27일 산재노동자의 날 대동한마당을 열어 산재환자와 조합원이 하나 되는 문화 행사 및 산재노동자의 날 전야제를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개최
 - 8) 2017년 4월 28일 ‘제17회 산재노동자의 날’ 행사 개최
 - 9) 2018년 3월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제 및 산재노동자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산재노동자 단체 간담회 실시
 - 10) 2018년 4월 28일 ‘산재 희생자 추모와 산재노동자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제18회 산재노동자의 날’ 행사 개최 및 산재노동자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를 위한 결의문 낭독

- 11) 2018년 4월 산재노동자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건의서(청와대, 고용노동부 5개 정당, 국회 환경노동위원) 제출
- 12) 2019년 4월 28일 '제19회 산재노동자의 날' 행사 개최
- 13) 2019년 9월 산재노동자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고 자문을 구하기 위해 국회 방문
- 14) 2020년 4월 28일 '제20회 산재노동자의 날' 행사 개최(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간소화하여 진행)
- 15) 2021년 4월 산재노동자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촉구를 위해 산재노동자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에 관한 법률(안)을 검토하여 김주영의원실에 의견 제출
- 16) 2021년 4월 28일 '제21회 산재노동자의 날' 행사 개최 예정(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간소화하여 진행)

○ 산재노동자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관련 자문 내용

- 2019년 9월 산재노동자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고 자문을 구하기 위해 국회 방문
 - 1) 장석춘 의원실
 - 산재노동자의 날 단독 입법은 국회 회기(2020년 4월 말)가 만료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타 의원실에서 산재노동자의 날 단독 입법으로 발의될 경우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동의할 의향
 - 2) 문진국 의원실
 - 산재노동자의 날 행사 취지를 잘 알고 있으며 그만큼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산재노동자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 3) 바른미래당 정책국
 - 산재노동자의 날 단독 입법은 어려움이 있고, 예산 지원 등 금전적인 투입이 되는 법안은 통과되기 어려움으로 단순한 기념일 지정이 유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한 개별법에 따른 기념일 지정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정부의 일반회계 출연금 확대는 일반회계와 기금은 다를 게 없고 기금이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일반회계 확대는 불가능할 것임
 - 4)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 산재노동자의 날 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 검토사항 확인 중

- 제정 법률로 기념일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노동부령 등 하위 법령으로 기념일을 제정하는 것이 유리
- 일반회계 출연금 확대에 기재부 입장은 기금과 일반회계를 같이 보고 있으며, 일반회계보다 기금 집행이 수월하므로 일반회계를 확대할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5. 산재노동자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방안

- 우리나라의 국가기념일은 어떤 특정한 날을 대상으로 정부가 제정 및 주관하여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과 '기타법령에 따른 기념일'에 의거하여 날을 기념함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 법령이 아닌 규정으로 되어 있어,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대통령이 선언
- 또는 소관 법령을 입법 발의하여 제정함으로써 국무회의에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기념일로 지정
- 최근 정부에서는 유사기념일을 통폐합하는 등 축소 조정하고 있는 실정임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노동절(근로자의 날), 어린이 날,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등 53개의 기념일이 지정되어 있음

○ 기타법령에 따른 기념일

- 정부 소관부처의 법 개정을 통해 기념일을 지정하고, 이를 근거로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기념행사를 실시함
- 기타법령에 따른 기념일에서는 소방의 날, 국민안전의 날 등 67개의 기념일이 지정되어 있음
- 산재노동자의 날을 '기타법령에 따른 기념일'로 제정하려면 의원 입법 발의나 정부 입법 발의로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기념일로 지정 가능함

○ 제정 방안

1) 별도 법안 발의에 따라 법령 제정

- 의원 입법 발의를 통해 별도의 법안 제정
- 산재 희생자에 대한 예우, 기념행사 등 종합적인 지원 가능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른 기념일 지정

- 의원 입법 발의 또는 정부 입법 발의를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여 산재노동자의 날 기념행사 진행

3) 고용노동부 훈령 제정을 통한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기간 설정

- 고용노동부 훈령 제정을 통한 산재노동자의 날 행사 진행
예)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 강조주간 행사 등

토론 3.

이현정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차별 없이 적용하라!

**죽은 자를 추모하고
산 자를 조직하라!**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이현정

 민주노총

민주노총 죽은 자를 추모하고 산 자를 조직하라

| 년도 | 산재(명)① | 산재사망(명)② | 경제적 손실액(억원) | 기준변경 통계③ | 차이④ |
|------|-----------|----------|-------------|----------|--------------|
| 2019 | 109,242 | 2,280 | 276,467 | 2,020 | - 260 |
| 2018 | 102,305 | 2,415 | 251,695 | 2,142 | - 273 |
| 2017 | 89,848 | 2,209 | 221,801 | 1,957 | - 252 |
| 2016 | 90,656 | 2,040 | 214,002 | 1,777 | - 263 |
| 2015 | 90,129 | 2,066 | 203,955 | 1,810 | - 256 |
| 2014 | 90,909 | 2,134 | 196,328 | 1,850 | - 284 |
| 2013 | 91,824 | 2,233 | 189,771 | 1,929 | - 304 |
| 2012 | 92,256 | 2,165 | 192,564 | 1,864 | - 301 |
| 2011 | 93,292 | 2,114 | 181,269 | 1,860 | - 254 |
| 2010 | 98,645 | 2,200 | 176,619 | 1,931 | - 269 |
| 2009 | 97,821 | 2,181 | 173,159 | 1,916 | - 265 |
| 2008 | 95,806 | 2,422 | 171,094 | 2,146 | - 276 |
| 2007 | 90,147 | 2,406 | 162,114 | 2,159 | - 247 |
| 2006 | 89,910 | 2,453 | 158,188 | 2,238 | - 215 |
| 2005 | 85,411 | 2,493 | 151,288 | 2,282 | - 211 |
| 2004 | 88,874 | 2,825 | 142,995 | 2,586 | - 239 |
| 2003 | 94,924 | 2,923 | 124,090 | 2,701 | - 222 |
| 2002 | 81,911 | 2,605 | 101,016 | 2,605 | 기준없어 조정못함 |
| 2001 | 81,434 | 2,748 | 87,226 | 2,748 | 기준없어 조정못함 |
| 합계 | 1,755,344 | 44,912 | 3,375,641 | | |
| 평균 | 92,387 | 2,364 | 177,665 | | |

- ① 산재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 통계
- ② 산재사망: 근로복지공단 산재사망 통계 (2012년 변경 전 통계 기준 적용)
- ③ 노동부 통계 변경 : 2012년 통계기준 변경 이후에 10년 치 통계 변경 발표
- ④ 노동부 통계 변경 기준에 따른 산재사망 통계 차이

민주노총 죽은 자를 추모하고 산 자를 조직하라

표로 확인할 수 있는 것

- 매년 2400명 산재사망
- 2001년 이후 20년간 경제적 손실 337조5641억원
- 이는 2020년 정부 총예산 513조5000억원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임
- 산재통계에는 공무원, 군인, 교사, 특수고용노동자 등의 통계는 빠져 있음
- 2012년 노동부 산재통계 처리 규정 일방적 변경
 - 〈예방통계〉 명목으로 ‘사업장외 교통사고’ ‘사고발생 1년경과 사망’ 등 통계에서 제외하여
 - 국내외로 발표되는 산재통계가 축소되는 착시 효과를 가져오고 있음

민주노총 죽은 자를 추모하고 산 자를 조직하라

1988년 문송면 수은중독 사망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충남 서산에서 서울로 와
온도계·압력계 제조업체 협성계공에 취업
온도계 수은 주입, 압력계 신나 작업
일한지 두 달 남짓 만에 쓰러진 15살 문송면

민주노총 죽은 자를 추모하고 산 자를 조직하라

동아일보 1988. 5.11 온도계工場근무 15세소년

두달만에 水銀중독

온도계제조회사에서 일하
던 15세소년이 취업 두달여
만의 수은중독으로 신나중독이
로 발전해 노동부가 이 회사
전종업원의 대해 특수검진을
실시토록 지시했다.
서울수은물류창고장 협성
계공(주)원 文松館(15社
南瑞山구축장)은 지난해 12
월 5일 이 회사에 입사, 온도
계 수은주입, 압력계 신나제
작업을 해오다 심한 두통, 요
통과 불면증의 시달리 지난
2월 8일 휴직한후 한달뒤인
3월 9일 서울대병원소아정
신과에서 진찰을 받고 결과
수은중독 신나중독이며 수은
중독이다.
정양관(1974) 중앙청 1월 8
일자 뉴스기염이래 한달전부
수은중독으로 입사한 문송
면의 수은중독을 조사한
결과, 문송면보안 수은반
이 황은자 정지호 등 15
수은중독, 문송면 등 15
것이며 기염전염

민주노총 죽은 자를 추모하고 산 자를 조직하라



수은.
 감각이상, 운동신경 이상을 일으키는 **신경/생식독성** 물질
 액체 수은이 깔려 있고,
 수은증기가 자욱했던 작업장에서 보호구 없이
 자신이 어떤 물질을 취급하는지 정보도 없이 일한 문송면

민주노총 죽은 자를 추모하고 산 자를 조직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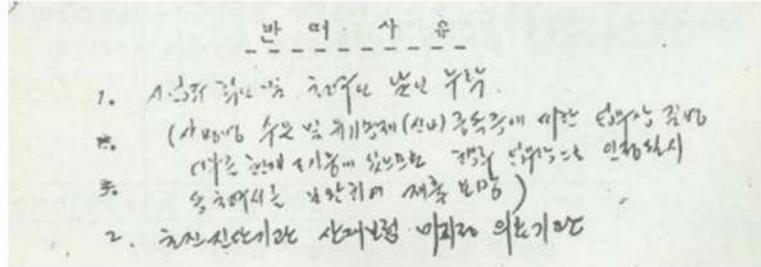
| | | |
|-----------------|--|------|
| 영문번호 70600144-0 | 진 단 서 | 의료인인 |
| 영 번호 7767 | 주민등록번호 730114-1672210 | |
| 1. 환자의 주소 | 중남 서산군 천북면 양산리 163번지 | |
| 2. 환자의 성명 | 문송면 김민(男) 73년 2월 14일 생 15세 | |
| 3. 병명 | <input type="checkbox"/> 감기 <input type="checkbox"/> 폐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수은 중독 증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유기용제(신나) 중독 증 | |
| 4. 발병일 | 88년 1月末 (추정) | |
| 5. 의뢰 목적 | 상기 병명으로 폐니산에인 귀온증이며, 앞으로도 노출된 및 증상에 호전될 때까지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
| 6. 비고 | 산재 청구용 (노동부 제출) | |
| 위와 같이 진단함 | | |
| 발행일 | 19 22년 | |
| 병·의원 주소 | 서충북병시 충주구 | |
| 병·의원 명 | 서충북 병 | 전화번호 |
| 병·의원 번호 | 34489 | 의사명 |

(참고)
 1. 본인 확인은 진단서자가 수은중독증의 예후(이성전지질 세는 기타 문헌을 주성 할 수 있는 항목으로 대체할 수 없다) 확인하고 작성한다.
 2. 병명을 입상지(신우해손)의 최종 진단명을 대략 □표에 *표로 표시한다.
 3. 병명의 국제질명 분류번호를 함께 기입한다.
 4. 본서에 본인 확인이 없으면 무효함.

원주세정원 양경숙

수은중독, 유기용제(신나) 중독으로
 3월 산재신청을 하지만,

민주노총 죽은 자를 추모하고 산 자를 조직하라



사업주 날인 없다,
서울대병원은 산재 지정병원 아니라며
노동부가 산재 신청서 접수 거부 (4월)

민주노총 죽은 자를 추모하고 산 자를 조직하라



양심 있는 지식인, 의료인, 노동자 투쟁으로
6월20일 산재 인정을 받지만,
제대로 치료조차 못 받고
1988년 7월 2일 사망

민주노총 죽은 자를 추모하고 산 자를 조직하라

송면이가 갑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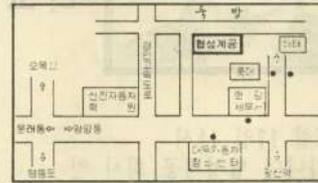
가난의 설움을 딛고 일하면서 공부하겠다고 송면이가 "아버지 걱정마세요"라던 착한 송면이가, 온몸에 통증과 진신발작, 물한모금도 토해내는 고통에 울부짖다가 싸늘한 시신이 되어 우리 앞에 왔습니다.

노동자·시민 여러분!

15세 어린소년이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하여 그의 원혼을 달래주세요.

양평등으로 모읍시다!

■ 대회장소 안내



■ 버스노선

• 128·115·100 - 1
160·139·125·96
3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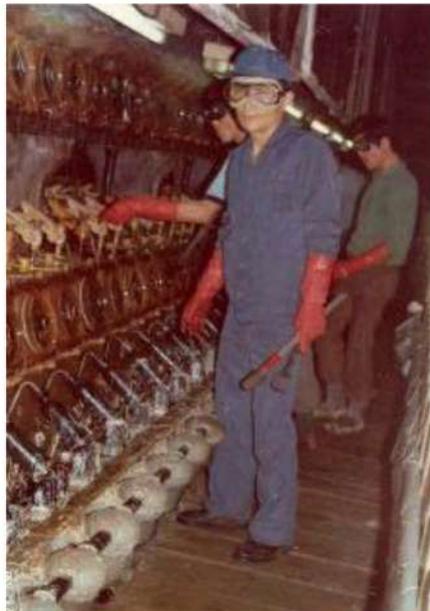
**직무유기 간접살인 노동부장관 처벌하라!!
중금속은 먹기싫다. 산업환경 개선하라!!
산업재해 유발하는 장시간노동 철폐하라!!
악덕기업주 양제석을 구속하라!!**

15세 문송면의 죽음은

- 공개사과와 보상금 합의
- 노동부 관계자 징계 확인 뒤 장례
- 원진레이온 직업병 인정 투쟁과 노동안전보건운동의 시작을 알린다

민주노총 죽은 자를 추모하고 산 자를 조직하라

**1988년
원진레이온
이황화탄소
집단 중독**



'이황화탄소'

2차 세계대전에서 독가스로 사용할 정도의 맹독성 물질
하지만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은 보호구나 안전설비 없이
어떤 유해한 물질을 취급하는지 모르고 일했다

민주노총 죽은 자를 추모하고 산 자를 조직하라



수은중독 문송면 기사를
보고서야 의심했다.

“혹시 우리도?”

민주노총 죽은 자를 추모하고 산 자를 조직하라

원진레이온, 이황화탄소 중독자 12명 발생

유해환경 놔두고 산재환자 강제 퇴사

언어장애 · 팔다리 마비...노동부는 팔짱만

7월 2일 문송면 사망 20일 뒤
언론에 폭로된 원진레이온 노동자
'집단 이황화탄소 중독'

문송면 때처럼
회사도 노동부도
쓰러지고 아픈 노동자를 외면했고
원진레이온 직업병 문제
해결을 향한
지난한 싸움이 시작됐다.

인간사를 생산하는 원진레이온(정기도 남양주군 이담읍 도봉리) 공장에서 신장독성 물질인 이황화탄소 중독환자가 잇따라 발생. 발발 통상직원이 주사유스라는 중증이비상내에 이르러 회사로부터 강제퇴직당한 사람이 12명이며 12명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독은 주로 이황화탄소 용액으로 복인 염료에서 인조견사를 뽑아내는 정사공에서 일했었는데 퇴직과 중 이송인(4), 인명(5) 등이 중독환자가 확인된 바에 보고 말을 전하며 퇴사했으나 퇴직하는 순간 장에서 해체 있으며 정사공(4), 정사공(4)이 중독 증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운 상태이다.

정사공에서 10년 이상씩 일해 온 이들 이황화탄소 중독자들은 팔다리마비와 언어장애 하나의 기형적장애, 정신이상, 생활불능상태에 중 이상한 증상으로 고생하고 있다.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안면이 마비된 서용선씨가 편이를 찾길(14)군의 도움으로 겨우 휠체어에 올라 있다. (남산유 기자)

한겨레 88. 7. 22

민주노총 죽은 자를 추모하고 산 자를 조직하라



- 노동자 · 시민사회단체 · 전문가, 시민들과 함께 한 원진레이온 직업병 투쟁 성과
- 노동안전보건 중요성 인식 확산과 노조 안전보건 활동 강화
 - 산안법 개정 및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신설
 - 직업환경의학과 신설
 - 직업병 인식 전환
 - 원진재단 부설 녹색병원 ·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일과건강) 설립 운영

민주노총 죽은 자를 추모하고 산 자를 조직하라



해마다
문송면의 기일 전 일요일에
마석 모란공원에서 ‘산재사망노동자 합동 추모제’

민주노총 죽은 자를 추모하고 산 자를 조직하라



2006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

민주노총 죽은 자를 추모하고 산 자를 조직하라

2008년

전국 순회 투쟁

- 포항: 길에서 죽는 화물 노동자
- 부산: 석면 폐암
- 여수: 발암물질 백혈병
- 광주: 자살하는 병원 노동자
- 청주: 산재은폐
- 이천: 화재참사
- 인천: 발전소 화재폭발

심야노동 폐지
서서 일하는 서비스 노동자에게 의자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보장

묻지마~ 산재왕국

매년 9만명 해마다 3배씩 다치고 매일 7명 죽는다
가장주요 사망원인인 산재는 여전히 산재왕국으로 남고 있다.
이런 노동조건과 피해로 인해 사망, 한강이아 10명 순환도 순조로 사망
과수원이 안전장치를 갖추지 유해한 상태에서 위험한 작업을 강요하여
발생하여 더욱 수 있다.

최근 피해자는 저임금 비정규 하청노동자
다치고 일제강점기 폐기 종로가 두세명도 끊고 일어난다.
수출에 있어도 안전장치를 갖추지 유해한 상태에서 위험한 작업을 강요하여
발생하여 더욱 수 있다.

이런 노동조건과 피해로 인해 사망, 한강이아 10명 순환도 순조로 사망
과수원이 안전장치를 갖추지 유해한 상태에서 위험한 작업을 강요하여
발생하여 더욱 수 있다.

건강한 노동!
안전한 일터!
과로사회 추방!

4월은 노동자 건강권쟁취 투쟁의 날

개인정보도 가리고, 모든 공백도 가리며 저는 사회, 바뀌어 왔다.
노조조직과 함께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



1일산재
300명 상해
7명 사망

4.28 세계 산재예방노동자 합동주요제

올해의 노동자 건강의 날~ 전국순회



민주노총

민주노총 죽은 자를 추모하고 산 자를 조직하라

2014년
 화학물질 정보공개 청구 캠페인
 근로복지공단 규탄 캠페인
 감정노동 보호입법 캠페인
 중대재해 사업장 현장실태 및 처벌결과
 증언대회
 국회 산재사망 사진전
 건강한 일터! 안전한 사회 쟁취!
 산재사망추모제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
 하청 산재 원청 책임 강화**

**민주노총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
 하청 산재 원청 책임 강화
 투쟁으로 쟁취하자!**

안전한 대한민국은 박근혜 정권과
 재벌 대기업의 집단 사기극

당진, 여수, 울산, 서울
 전국에서 노동자 죽음의 행진이 계속됩니다.
 구미 불산, 삼성 불산, 빙그레 알도미아,
 화학물질 사고로 주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주장하는 박근혜 정권
 머리 조아리며 사회 피복안스를 하는 재벌 대기업
 그러나, 산재사망의 당사자인
 하청 비정규 노동자의 사고조사도, 안전점검도 거부
 삼성, 현대, SK 등 재벌 대기업은 위험의 외주화로
 1년에 산재보험료 3,400억 감면 받았습니다.

5분당 1명
 산업재해
 부상

3시간당 1명
 산업재해
 사망

**4월28일은
 세계 산재사망 추모 노동자의 날**
 190여 개국이 88만 노동자 산재사망 추모로 세계에서 세계 일대일이기
 모두가 생일로 지양했고, 150여개에서 공휴일성을 인정받았다.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이렇게 합시다**

- 4월28일 당일엔 10시 10분 '죽은 자를 추모' 집회
- 고통을 나누는 마음으로 지원한다.
- 산재사망 사업 및 중대재해(중대) 교육용 실시한다.
- 한자지 쓰기, 추모 책 만들기, 추모전시회 및 시가발표회 등
- 산재사망 노동자를 추모한다.
- 지방별 산재사망 당사, 재발방지 대책 등 실천에 적극 참여한다.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 날짜 | 사업 및 투쟁 방안 | 비고 |
|--------|------------------------------|-----------------|
| 4월 1일 | 산재사망 추모 집회 | 전국 1, 2 지방에서 진행 |
| 4월 14일 | 안전한 대한민국을 쟁취하기 위한 100만인명 운동 | 전국 1, 2 지방에서 진행 |
| 4월 15일 | 화학물질 안전을 위한 '화학물질 안전법' 제정 촉구 | 화학물질 안전법 제정 촉구 |
| 4월 16일 | 화학물질 안전을 위한 '화학물질 안전법' 제정 촉구 | 화학물질 안전법 제정 촉구 |
| 4월 17일 | 화학물질 안전을 위한 '화학물질 안전법' 제정 촉구 | 화학물질 안전법 제정 촉구 |
| 4월 18일 | 화학물질 안전을 위한 '화학물질 안전법' 제정 촉구 | 화학물질 안전법 제정 촉구 |
| 4월 19일 | 화학물질 안전을 위한 '화학물질 안전법' 제정 촉구 | 화학물질 안전법 제정 촉구 |
| 4월 20일 | 화학물질 안전을 위한 '화학물질 안전법' 제정 촉구 | 화학물질 안전법 제정 촉구 |
| 4월 21일 | 화학물질 안전을 위한 '화학물질 안전법' 제정 촉구 | 화학물질 안전법 제정 촉구 |
| 4월 22일 | 화학물질 안전을 위한 '화학물질 안전법' 제정 촉구 | 화학물질 안전법 제정 촉구 |
| 4월 23일 | 화학물질 안전을 위한 '화학물질 안전법' 제정 촉구 | 화학물질 안전법 제정 촉구 |
| 4월 24일 | 화학물질 안전을 위한 '화학물질 안전법' 제정 촉구 | 화학물질 안전법 제정 촉구 |
| 4월 25일 | 화학물질 안전을 위한 '화학물질 안전법' 제정 촉구 | 화학물질 안전법 제정 촉구 |
| 4월 26일 | 화학물질 안전을 위한 '화학물질 안전법' 제정 촉구 | 화학물질 안전법 제정 촉구 |
| 4월 27일 | 화학물질 안전을 위한 '화학물질 안전법' 제정 촉구 | 화학물질 안전법 제정 촉구 |
| 4월 28일 | 화학물질 안전을 위한 '화학물질 안전법' 제정 촉구 | 화학물질 안전법 제정 촉구 |
| 4월 29일 | 화학물질 안전을 위한 '화학물질 안전법' 제정 촉구 | 화학물질 안전법 제정 촉구 |
| 4월 30일 | 화학물질 안전을 위한 '화학물질 안전법' 제정 촉구 | 화학물질 안전법 제정 촉구 |

민주노총 죽은 자를 추모하고 산 자를 조직하라

2016년 5월 28일 구의역 스크린도어 19살 하청노동자 김군 산재사망

2016년 5월 28일 승강장
 인민문을 고쳐도 유명을 달리한
 비정규직 청년노동자를 잊지 않습니다.
 사람과 노동자가 안전한 거하철을 만들겠습니다.

2016년 한겨레 김봉규

민주노총 죽은 자를 추모하고 산 자를 조직하라

2017년

산재사망 및 재난 사고 사진전 · 추모부스
 대선후보에게 묻는다,
 국민안전 대토론회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대선후보
 서약식
 전국 집중 집회

**위험의 외주화 금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세월호참사 3주기
 7월과 다함의 4월

**위험의 외주화 금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투쟁으로 쟁취하자!**

**위험의 외주화 주범 재벌 규탄!
 건강한 일터 안전사회 쟁취!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
 2017.4.26.(수) 14:00 서울 도심

백근에 달하는 3월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안전의 목소리, 다짐과 용과 의지에 공명하는 저자들에 의해 사고, 재발, 재발, 재발이 지속되는 위험사회
 건강한 일터 안전사회
 민주노총이 앞장서 투쟁합니다.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조합원 4가지 실천**

- 권 조항원 산재사망 추모 리본 달기
- 권 사망장 쉼수막 걸기 조합원 석회돌 부패
- 15초 1분씩 (위험의 외주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지역별 추모주선 및 4.26 중앙 집회 참석

4월26일은 세계 산재사망 추모 노동자의 날!
 1993년 태국 188명 노동자 산재사망 추모로 시작
 세계 13개국 국가 기념일 지정, 110개 국가 공동행동

4월 대입에 실천합니다

| 날짜 | 시간 및 투쟁장소 | 비고 |
|-------------------|---|---------------------------|
| 4월 14일 | 정 주현일 재발 방지 / 노총 12교로 일터에 걸기 / 조합원 선출대회 | 단위 사진전 |
| 4월 10일 - 10일 | 세월호 참사 3주기 추모 사진전 - 산재사망 및 재발 사고 사진전, 추모 행사 | 공화당 중앙당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
| 4월 10일 - 22일 | 한국 총노조연합 산재사망 추모 주간 사진전 - 산재 추모 신년회 사진전 - 산재 추모 신년회 사진전 | 국립중앙 각 산업별 |
| 4월 12일 10시 14시 | 국민총연맹(총연맹) 전국 안전 대토론회 안전한 일터 사회를 위한 국민총연맹 서약식 | 국민총연맹 연세대학교 |
| 4월 20일 서울 | 2017년 4월의 상단기전 안전행위 | 연세대학교 |
| 4월 20일 14시 서울 | 전국 집중 쉼수막 위험의 외주화 주범 재벌 규탄 및 건강한 일터 안전사회 쟁취 투쟁 결의대회 | 서울 도심 |

민주노총 죽은 자를 추모하고 산 자를 조직하라

2019년

노동자 참여제도 현장실태 증언대회 및
 국회 토론회
 산재사망 추모·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집중 집회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노동자 참여로 쟁취하자!**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노동자 참여로 쟁취하자!**

-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하라!
-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고 원형책임 강화하라!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하라!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집중 집회
 2019년 4월 17일(수) 14시 청와대 사랑채 앞

**4월엔 '일할
 함께 합시다'**

세월호 참사 3주기 추모 사진전 추모 주선사업 행사
 기자회견 등 서울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등 국회 토론회
 4월 17일(수) 14시 2019년 4월 17일(수) 14시 2019년 4월 17일(수) 14시 2019년 4월 17일(수) 14시
 4월 17일(수) 14시 2019년 4월 17일(수) 14시 2019년 4월 17일(수) 14시 2019년 4월 17일(수) 14시

민주노총

민주노총 죽은 자를 추모하고 산 자를 조직하라

기억하지 않음으로 반복되는 산재사망



2008년 연합뉴스

2008년 1월 8일 경기도 이천 코리아2000 냉동창고 산재참사
40명 사망: 시공사 (주)코리아2000 벌금 2000만원
노동자 1명 사망에 50만원 벌금

민주노총 죽은 자를 추모하고 산 자를 조직하라

기억하지 않음으로 반복되는 산재사망



경기소방방재본부

2020년 4월 29일 경기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산재참사
38명 사망/1심: 시공사 건우 법인 벌금 3천만원
발주처 (주)한익스프레스 팀장 집행유예 2년

민주노총 죽은 자를 추모하고 산 자를 조직하라

기억하지 않음으로 반복되는 산재사망

구의역 (2016년)
 언론보도
 시민대책위 구성
 진상조사단 구성
사장 벌금 1천만원
 안전업무직 신설
 무기계약직 직접고용
 서울시 자회사 방침 철회

강남역 (2015년)
 언론보도, 민주노총 기자회견
 고발, 원청 무죄

성수역 (2013년)
 단순변사 처리, 언론보도 X



민주노총 죽은 자를 추모하고 산 자를 조직하라

기억하지 않음으로 반복되는 산재사망

한국일보

2018년 05월 24일 목요일 A12면

구의역 사고 2년, 스크린도어 고장 절반 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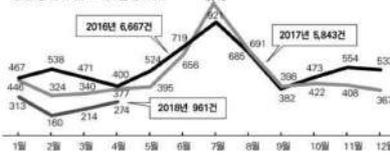
올해 1~4월 서울 지하철 1~8호선 승강장 안전문 고장건수가 2년 전 같은 기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발생한 철도사고 역시 전년 대비 절반 이상 감소했다.

서울시는 23일 '구의역 사고' 2년을 맞아 당시 밝힌 재발방지 안전대책 후속 현황을 발표했다. 구의역 사고는 2016년 5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내선순환 승강장 안전문을 수리하던 와중 열차 직원 김모(당시 19세)군이 전동차에 끼여 사망한 사고다.

시에 따르면 올해 1~4월 서울 지하철 1~8호선 승강장 안전문 고장 건수는 94건으로 집계됐다. 2016년 1,876건에 비해 49% 감소했다. 지난해 발생한 철도사고는 모두 5건으로 전년(12건) 대비 58.4% 줄었다.

시는 '이번호에 집계된 수치'는 '2017 국제표준 서비스품질지표' 기준으로도 영국 런던, 미국 뉴욕 등 세계 주요도시 지하철보다도 높은 안전수준을 나타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구의역 사고는 '사법 특별시'로 가는 과도기에 생긴 비극"이라며 "비용보다 사람, 속도보다 안전이라는 원칙을 세워 시험과 안전관리, 시스템 등 안전 전방을 보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승강장 안전문 고장 발생 건수



외주용역 안전업무 정규직 전환
 연봉 평균 66% 인상, 3865만원
 지난해 철도사고도 58% 줄어

서울시, 2022년까지 4조원 투입
 노후 전동차 교체·시설물 개량

이날 시는 '제2의 구의역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도 공개했다. 시와 서울교통공사는 ▲ 승강장 안전문 안전검사 ▲ 안전업무직의 정규직화 ▲ 전동차 등 노후시설 개선 등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시와 공사는 내년 4월까지 승강장

안전문 주요 핵심부품 교체와 노후역사 전면 재시공을 완료할 계획이다. 전역시 대상 장애물 감지센서 교체와 유사시 대피로로 쓰이는 개폐가능 비상문 설치작업은 올해 안에 마무리 짓는다.

시는 또 그간 외부 용역을 했던 스크린도어 안전 업무를 2016년 9월 직영으로 전환하고 인력을 146명에서 200명으로 늘렸다. 이어 지난 3월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

는 공사 소속 무기계약직 1,285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외부업체에서 일하다 정규직으로 전환한 이들의 연봉은 평균 66% 올랐다. 2015년에 평균 2,322만원이었던 월임금이 올해 3,865만원이 됐다. 임금 인

상률은 최소 9%, 최대 178%를 기록했다. 또 스크린도어 유지보수직 연봉이 평균 88%, 의무자원은 81%, 전동차감속저항은 47% 상승했다.

시는 노후시설 개선 등 안전 예산도 늘려 가고 있다. 노후시설 개선에는 올해 6,870억원이 들어 거 전년(5,599억원) 대비 23.6% 늘었다. 올해 도시철도 최초로 노후 시설 개량에 대한 국고보조금도 383억원 확보했고, 양공시 통합 효과로 연 214억원 이상 안전예산도 마련했다.

시는 2022년까지 약 2조2,000억원을 들여 노후 전동차 610량을 우선 교체하고 약 2조원을 써 철도·전기·전차 시설물을 개량할 방침이다. 또 2023년까지 약 2,4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하철 1~8호선의 운전, 신호, 전력, 설비 등 운영 전반을 통제하는 안전 컨트롤러 역할 할 '스마트통합관제센터'도 만든다.

구공민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주요 사고·장애 고해 요인인 노후 핵심부품, 노후차량 및 전력·신호 기기, 차량의 취급 부주의 문제를 개선해 '거센다'와 '비데어터' 분석시스템 등 신기술 활용도 더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주희 기자

민주노총 죽은 자를 추모하고 산 자를 조직하라

기억하지 않음으로 반복되는 산재사망

철거 중 집단 수은 중독

| | | |
|----------|------|--|
| (주)남양연구소 | 보도자료 | |
|----------|------|--|

이전 남양연구소 정수공정장 화재로 수은 노출의 피해를 입은 근로자 64명분의 화재 사후에 남양연구소 입회할 경우 고액 배상 지급됩니다.

남양연구소 입회할 경우 화재사건 관련 배상금 지급도 어렵고, 남양연구소 입회할 경우 이번 화재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두 중심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남양연구소는 이번 사태를 교훈삼아, 안전관리요원에게 입회해서 남양연구소 사법 절차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향후 이러한 추가 사태를 방지할 목적으로, 총 10억 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총 10억 원입니다.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해 사태 파악이 늦었고

경황이 없고 대처가 미흡해 깊은 상처를 드렸습니다.

이전 화재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여 '다단계 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한 '고도급' 제도를 추진 중입니다. 이번 화재로 인한 피해는 근로자 및 가족에게서 발생하며, 피해는 사후에 발생할 수 없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한 피해는 사후에 발생할 수 없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한 피해는 사후에 발생할 수 없습니다.

남양연구소는 정수공정장 화재로 인하여 이산가족이 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며, 남양연구소 화재사건으로 입회할 경우 배상금 지급이 어렵고, 이번 화재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두 중심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화재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여 '다단계 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한 '고도급' 제도를 추진 중입니다. 이번 화재로 인한 피해는 근로자 및 가족에게서 발생하며, 피해는 사후에 발생할 수 없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한 피해는 사후에 발생할 수 없습니다.

YTN

**2015년 10월 광주, 형광등 제조설비 철거과정에서
20여 명의 노동자가 수은에 노출·중독
4단계를 걸친 하도급으로 파악조치 늦어짐**

민주노총 죽은 자를 추모하고 산 자를 조직하라

기억하지 않음으로 반복되는 산재사망

**2016년 노동자 7명 메탄올 노출 실명
삼성과 LG에 핸드폰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에서 일한 청년 노동자,
실명된 이들 모두 불법파견 된 노동자**

국가는 직무유기,
노동자는
실명 피해

민주노총 죽은 자를 추모하고 산 자를 조직하라

정부와 기업이 기억하지 않음으로 반복되는 산재사망

민주노총 죽은 자를 추모하고 산 자를 조직하라

2021년 1월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2022년 1월 27일 시행



민주노총 죽은 자를 추모하고 산 자를 조직하라

대만 산재노동자보호법 (Act for Protecting Worker of Occupational Accidents)

제4장 부칙 39조
매년 4월 28일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로 지정
노동자 사망 기념비 건립

대만 산재피해노동자협의회 활동가의 말
“이날은 공휴일(쉬는 날)이 아니에요.
정부는 이날을 기회삼아 겉보기에 선전을 하는 것뿐입니다.”

“산재노동자보호법은 노동자의 경험으로 출발해
노동자가 나서서 입법을 촉진한 것이었다. 노동자 스스로
산재사망 노동자를 기리는 일을 추진하는 게 운동에서 의미가 있죠.”

민주노총 죽은 자를 추모하고 산 자를 조직하라

캐나다 4월 28일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

일터의 건강과 안전을 개선하고
부상, 질병 및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공동으로 우리의 약속을 새롭게 다짐하는 날

우리가 반영해야 할 것은
통계수치 만이 아니라
노동자의 죽음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는
사랑하는 사람, 가족, 친구 및 동료들의
바뀐 삶



민주노총 죽은 자를 추모하고 산 자를 조직하라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노동안전보건 주요 이슈 중심
개선이 필요한 현장 안전보건 주제 발굴
산재사망 관련 정부·기업의 문제점 폭로
제도개혁 요구
캠페인, 토론회
추모와 집회, 시민과의 연대

7월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기념식: 유공자 훈·포상
국제안전보건전시회
안전보건 세미나
우수사례 발표대회
지역별 행사
일자리 박람회

민주노총 죽은 자를 추모하고 산 자를 조직하라



노동자의 위상
위험업무를 거부할 권리
“작업하는 도중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들면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 이런 권리 덕분에
‘위험하면 하지 마’라는 분위기가 현장에 자리 잡았다.”



☞ 민주노총 죽은 자를 추모하고 산 자를 조직하라



☞ 민주노총 죽은 자를 추모하고 산 자를 조직하라



민주노총 죽은 자를 추모하고 산 자를 조직하라

중대재해는 기업의 조직적 범죄입니다

사안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중시기업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조치를 해야 합니다.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됩니다.

<사업주의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4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3. 중장영양(중·장년차)근로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가진 시정 통보 명령 이행 의무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5조에 의해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통한 중대재해 예방, 통수고용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소수의 기업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경영책임자 처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5조)

- * 안전 사업: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 * 부실 또는 소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 * 허위 서류 제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벌금규정] 법 위반 행위자 외에 법인 또는 기관에게 벌금형
 안전 사업 : 50억원 이하의 벌금
 사업 외 분야에대 : 1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 없는 현장, 투쟁으로 쟁취할시다!

- 노동자 참여로 현장 안전보건 체계 구축**
 참여: 2022년 안전주간, 산업안전주간위원회, 위험성평가, 근로계약 이행확인조사, 안전홍보 시
- 대표이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이사의 보고 의무 이행 강시 활동**
- 중대재해 발생 시 현장 대응 및 예방 체계 구축**
 시·도지사 제명, 임시 산재기 개최 등 노조 제명, 사법시위 반대 요청, 언론 대응 등

민주노총 산재노동자지원센터

**죽은 자를 추모하고
산 자를 조직하라!**

고맙습니다!

민주노총

66

토론 4. 4월 28일 산재 노동자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에 관한 토론문

박민호 (전국산재노동자 총연맹 위원장)

1. 서론

정부가 산재 통계를 공식 집계하기 시작한 1964년부터 지난 2020년 9월까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무려 98,329명, 재해자는 5,078,679명에 달한다. 경제발전을 위해 무수히 많은 노동자가 노동현장에서 산업재해로 귀중한 목숨을 잃거나 장애인이 되었음에도 이들의 국가적 공로에 대한 명예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경제위기를 빌미로 또다시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의 기념일과 기타 법령에 따른 기념일 중 노동자의 산업재해 노동자와 산업안전보건에 관련된 기념일은 없다. 정부가 산업재해 노동자를 외면하는데 어떻게 우리나라의 재해가 줄어들기를 바라는 것인지 한심할 따름이다. 정부는 산업역군인 산업재해 노동자와 가족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 여전히 우리나라가 산재 공화국인 것은 산재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 때문이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4월 28일 산재노동자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여 국가경제발전을 위해 희생한 노동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공로를 인정하고 산재희생자와 산업재해 노동자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했다. “정부의 최우선 가치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며,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 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법정기념일로 산재노동자를 추모하는 나라들

국제노총과 국제노동기구(ILO)는 1996년부터 이 날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로 부르며 유엔이 정하는 국제기념일로 만들기 위한 활동을 펼쳤다. 이미 110개 이상의 나라에서 매년 이날을 기념하는 추모행사를 열고 있다. 캐나다·브라질·스페인·대만 등 13개 나라는 이날을 국가 공식기념일로 지정했다.

태국의 경우 188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1993년 5월 10일을 법정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4월 28일을 최초로 국가 차원의 추모의 날로 정한 나라는 캐나다로, 1991년에 입법되었다.

국제자유노련 차원에서 4월 28일을 기념하기 시작한 후, 이 날을 최초로 국가 차원에서 공식 채택한 나라는 스페인으로 1999년 공식 행사가 진행되었다. 타이완에서는 2001년 10월, 10여 년에 걸친 산업안전 운동단체들의 노력과 투쟁의 결과로

'산업 재해 및 질병 보호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의 한 조항으로 4월 28일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로 정하였다.

브라질에서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은 노동자당의 룰라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2003년, 노사정 차원에서 4월 28일을 법정 추모의 날로 정할 것을 건의함으로써 확정되었다. 이외에도 미국, 영국, 포르투갈, 도미니카공화국, 페루, 아르헨티나, 버뮤다, 파나마가 4월 28일을 법으로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로 정하고 있다.

2002년 처음으로 추모행사를 가진 포르투갈에서는 정부가 특별 우표를 발행하고, 모든 공공 건물에서 국기를 조기 게양하도록 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렇게 법적으로 확립된 19개 나라 외에 9개 나라에서 노동조합 조직들이 입법 요청을 준비하고 있다.

3. 대한민국의 국경일

- ⊙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53개의 기념일과 개별법에 규정된 55개의 기념일이 있다
- ⊙ 문재인 정부가 제정한 기념일

| 기 념 일 명 | 기 념 일 | 제 정 년 도 | 비 고 |
|-----------------|---------|---------|-----|
| 2.28 민주화 운동 기념일 | 2월 28일 | 2018년 | |
| 3.8 민주외거 기념일 | 3월 8일 | 2018년 | |
| 동학농민 혁명 기념일 | 5월 11일 | 2019년 | |
| 부마항쟁 기념일 | 10월 16일 | 2019년 | |
| 6.10 만세운동 | 6월 10일 | 2020년 | |

4. 정부에서 산재사망, 장애인, 직업병 노동자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가?

퇴근할 “권리”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퇴근하지 못한 노동자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근본일 것이다. 우리 노동자들은 그동안 수없는 투쟁으로 때로는 하나뿐인 생명을 바치며 노동자의 안전과 기본권을 찾기 위해 투쟁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산업재해를 OECD 평균 이하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산재사고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당연한 결과다. 산재노동자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조차 투쟁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노동자를 몰고 가는 정부가 되지 않았는가. 일 년에 2,000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10만 명이 장애자가 되는 나라에서 !

산업 재해를 입으면 노동자에서 폐기되는 국가, 내가 낸 산재보험료를 가지고도 승인을 받지 못해 다시 투쟁해야하는 국가의 노동자. 국가는 산재노동자의 행복할 권리와 기본권 보장을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 약속을 이행하기 바란다.

5. 결론

산업재해가 피해자 자신이나 가족에게 주는 불행은 결코 금전적인 보상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노동력의 상실이나 가정의 파괴라는 면에서 사회적 책임으로 해결해야 한다. 모든 문제를 혼자서 감내해야 하는 산재사망노동자 유가족과 산재장애인, 직업병으로 정신적 압박감에서 벗어나지 못해 성격이 괴팍해지거나 심지어 자살까지 감행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산재노동자들의 다양한 사회적 교류와 재활의지확립 및 복지정책 개발 수립 등을 위해 산재노동자의 날이 지정되어 존재가치를 확신하며 당당하게 살아 갈 수 있는 환경이 시급히 조성 되어야 한다.

또한, 기념일 행사의 관료화로 인해 산재노동자가 들러리로 변질되는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 기념일 제정과 함께 노총과 산재단체가 기념사업회를 구성하여 행사 및 추모문화제 등을 주관하고, 기념관(전시관)을 건립하여 산재노동자의 위상 재고 및 산재단체 및 산재노동자를 지원해야 한다.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을 위한
입법 방향 토론회

